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
----------	----

2010년 8월 13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8월 12일 한명희의원 외 9인
-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0년 8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한 명 희 의원)

제안이유

-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한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 대한 성 노예화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배상·교육 문제는 한·일간의 중요한 현안이자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최근의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제8차 정기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권고에 진지하게 응하고, 구체

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6년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여 왔음.

-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7년에만도 미국, 유럽의회,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일본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과 의견서 채택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향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 정작 대한민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의 공식사과와 피해배상 및 교과과정에서의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17대 국회 기간 중 제안되었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3건의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동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촉구함.
- 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검토요지

- 본 안건은 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위안부’)화 한 것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안된 것임.

- 일본군위안부는 1993년 이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 234명의 생존자 중 이미 135명이나 사망하고, 99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며,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2006년 7월 5일에는 당시 생존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임.
- 아시다시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엄청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관계의 국가간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서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일본 다카라즈카시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2010년 3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정부 부서와 국회, 그리고 일본대사관 등 관계단체로 이송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일본군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지방의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12명)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9
----------	----

발의연월일 : 2010. 8. 12.

발 의 자 : 한명희 의원 외 9인

1. 주 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위안부’)화 한 것에 대하여,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 시의회, 키요세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된 점을 환영하며,

1993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일본국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건강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생존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 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한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 대한 성 노예화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배상·교육 문제는 한·일간의 중요한 현안이자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주지하다시피 세계인권회의의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 38조는 무력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 특히 살인, 체계적 강간, 성 노예 그리고 강요된 임신을 포함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위반은 특별히 효력 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에서 전쟁 중 여성이 당하는 강간에 대한 처벌과 배상 필요성 규명, 1996년과 1998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는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채택, 2003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당국에게 “전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 권고, 가장 최근의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제8차 정기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권고에 진지하게 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6년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여 왔음.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7년에 만도 미국, 유럽의회,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일본국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과 의견서 채택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향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대한민국국회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일본국의 「戰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의促進에관한法律」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03년 2월 26일 의결하여 일본국 의회에 송부한 바 있으며, 2007년 미국 하원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지지결의안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국의 공식사과와 피해배상 및 교과과정에서의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17대 국회 기간 중 제안되었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3건의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993년 이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 234명의 생존자 중 이미 135명이나 사망하고, 99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며,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되어 2008년 10월 8일(수) 현재 만 16년을 넘어 834차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 7월 5일에는 당시 생존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상태임.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8년 8월 31일 공동으로 ILO 기준 적용전문가위원회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와 요청을 담은 보고서를 1995년에 이어 제출한 상태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동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의회는 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위안부’)화 한 것에 대하여,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 시의회, 키요세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된 점을 환영하며,

1993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일본국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건강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생존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 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